

왜 재정건전성 인가?

한국재정학회 2015년 하계 정책심포지엄 토론문

2015. 08. 27.

국회에산정책처 세수추계1과장

심 혜 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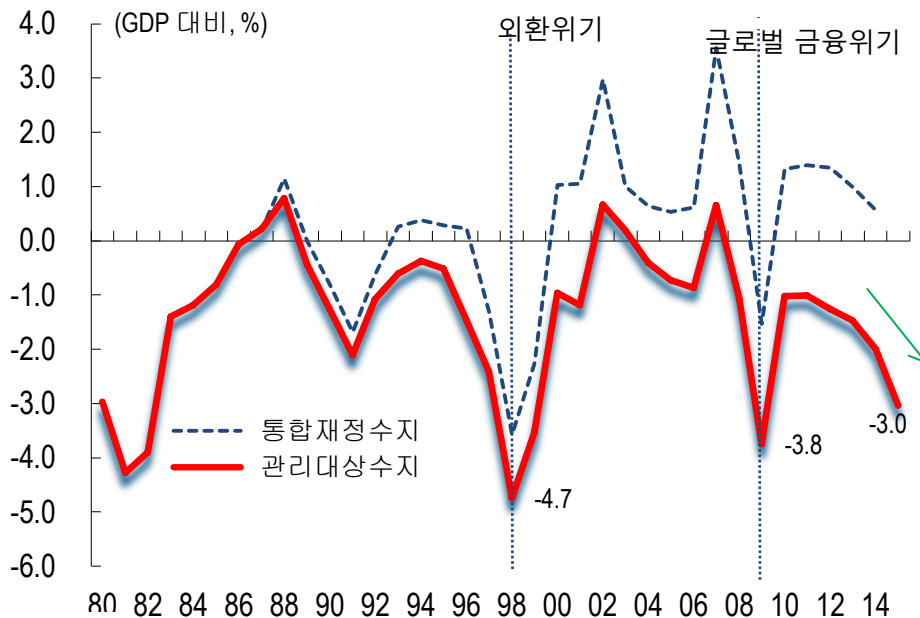
Contents

- I. 두번의 위기 후 우리 재정의 모습은?
- II. 관례가 되어 버린 국가채무의 누증
- III. 왜 재정건전성 인가?
- IV. 정치현상에서 본 예산과정
- V.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세입기반
- VI. 결론 및 제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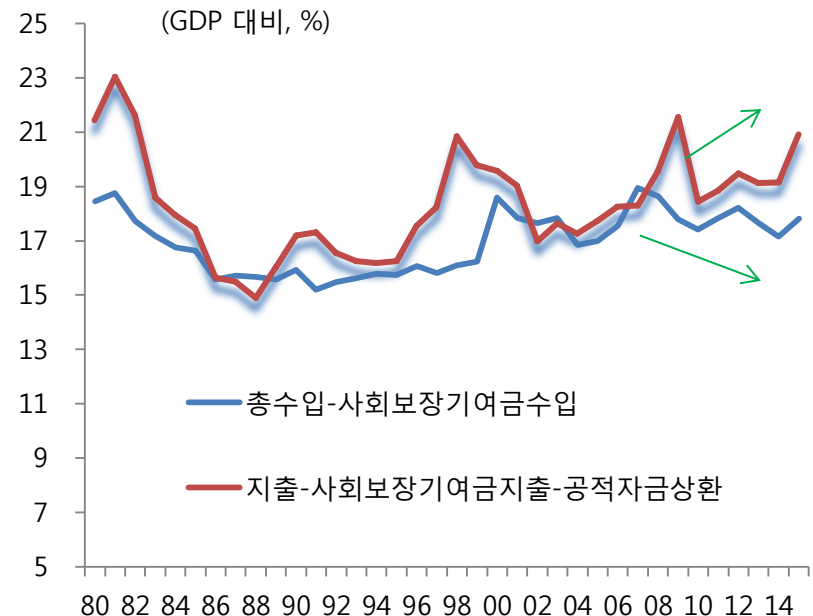
I. 두 번의 위기 후 우리 재정의 모습은 ?

- ['98년 외환위기] GDP대비 재정수지: (90년대)-1~2%대→(98년)-4.7%
- ['00~'07년] 이례적 재정수입 증가로 재정수지는 균형수준으로 회복
- ['08~09년 글로벌 금융위기] GDP대비 재정수지: ('07년) 0.7%→(09년) 3.8%
- ['10~'15년] 성장률 둔화 및 감세정책으로 인한 수입 부진, 복지수요 관리 미흡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누증

< 재정수지 >



< 수입 및 지출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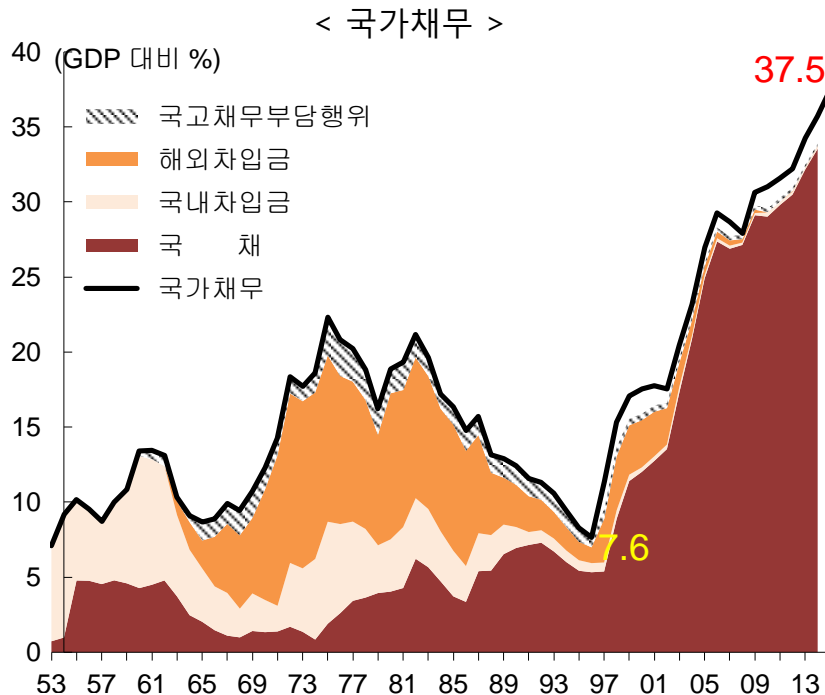
II. 관례가 되어 버린 국가채무의 누증

□ 국가채무는 96년부터 '15년까지 19년 동안 542.7조원 증가

✓ '96년: 36.8조원(GDP대비 7.6%) → '15년 추경: 579.5조원(GDP대비 37.5%)

✓ ('96~'15년, 연평균 증가율) : 국가채무 15.6% vs 경상GDP 6.3%

□ 조세로 보전해야하는 일반회계 적자 국채 증가세 확대



< 정부별 국가채무 증가액(조원) >

	국민의 정부 (98~02)	참여정부 (03~07)	이명박 정부 (08~12)	박근혜 정부 (13~15)
◇ 국가채무	73.5	165.4	143.9	136.4
(GDP대비, %)	(6.7p增)	(12.1p增)	(3.1p增)	(2.7p增)
▪ 일반회계 적자국채	26.4	29.2	93.0	96.2
▪ 외평기금, 채권	16.5	69.0	63.3	46.2

III. 왜 재정건전성 인가?

- 재정을 통한 단기적 경기대응의 위험성 증대
 - ✓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상황이 일시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가?
 - ✓ 위기의 일상화, 글로벌화 → 재정으로 막을 수 있는가?
 - 가랑비(단기적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적자 확대)가 계속된다고 해서 가뭄을 해소(경제 정상화)할 수 없음. 어느새 옷만 흠뻑 적시는 꼴(재정위기)
- 앞으로 우리가 겪을 위기는..
 - ✓ 재앙적 고령화 사회가 목전에 직면.. 통일시대 대비
 - ✓ 재정여력을 비축을 위한 재정의 정상화 시급
 - ✓ 지출의 초점도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경제 체질개선에 맞출 필요

IV. 정치현장에서 본 예산과정

‘지출구조조정, 세입확충’ 총론 찬성, 각론에서는 ?

□ “2013년 세입예산안 과대계상 논란”

- ✓ (국회예산정책처) 내년 정부수입 예산안보다 13.6조원 부족 전망
- ✓ (국정감사, 기재부 장관) “내년 세입예산 달성 무리 없다”
- ✓ (국회 심의 결과) 세입 0.5조원 감액
- ✓ (13.4월, 추경편성) 세입예산 12조원 감액, 국채발행 15.8조원으로 보전

□ “연말정산 파동”

- ✓ (언론보도) “중산층 근로자에 대한 세금 폭탄”
- ✓ (당정협의) “표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리는가?”
- ✓ (보완대책) “5,500만원 이하는 한푼도 세금 늘지않게 소급안 마련할 것”

□ SOC예산 구조조정 필요, But 국회서 매년 증액

- ✓ (‘15년 예산) 총지출 정부안 대비 0.6조원 순감액, SOC 0.4조원 증액(12개 분야 중 최대 증액)

□ 지방재정 효율화 필요, But 지자체 반발은 ?

- ✓ 국세감액경정 98년 이후 5차례, 추경편성 연도에 지방교부세 감액한 연도는 98년 한 해

V.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세입기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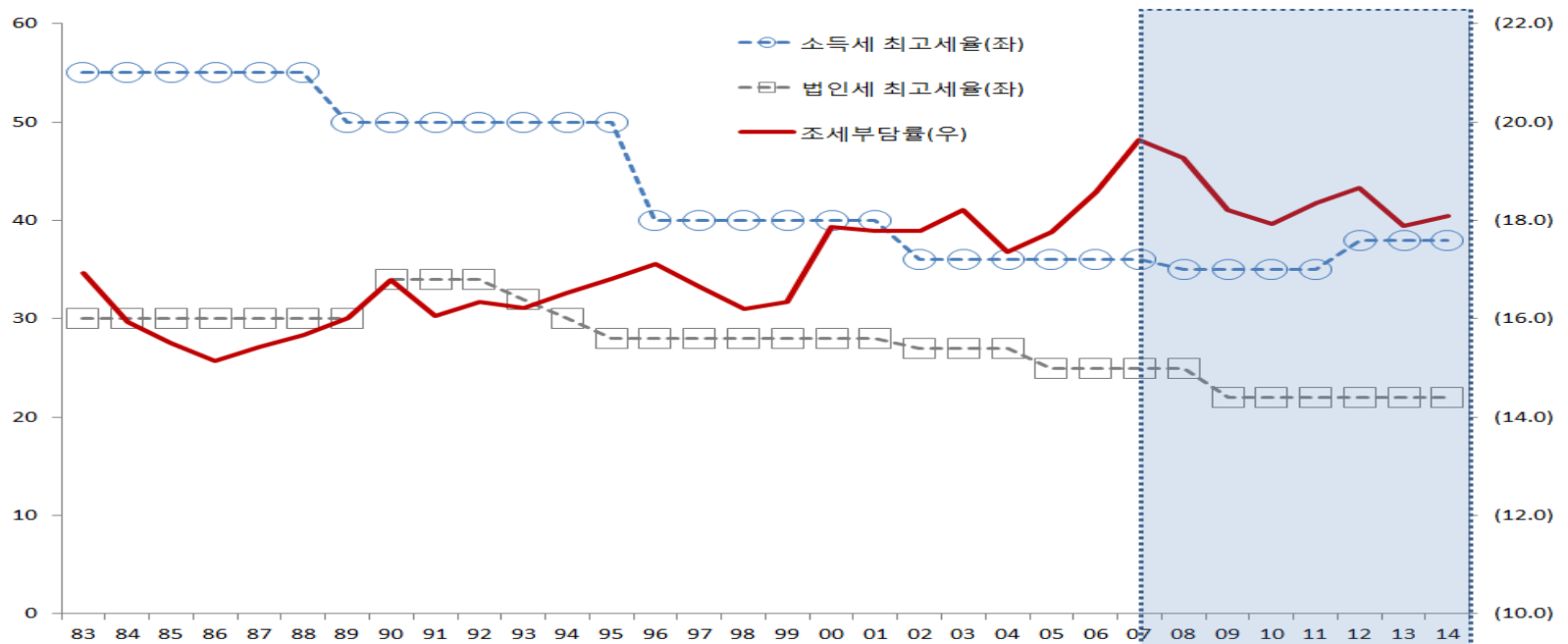
1. 조세부담률 정체

□ 금융위기 이후 세입기반의 정체

✓ 조세부담률은 2009년 이후 18% 내외 수준에서 정체

□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연관

<세율변화와 조세부담률($\%$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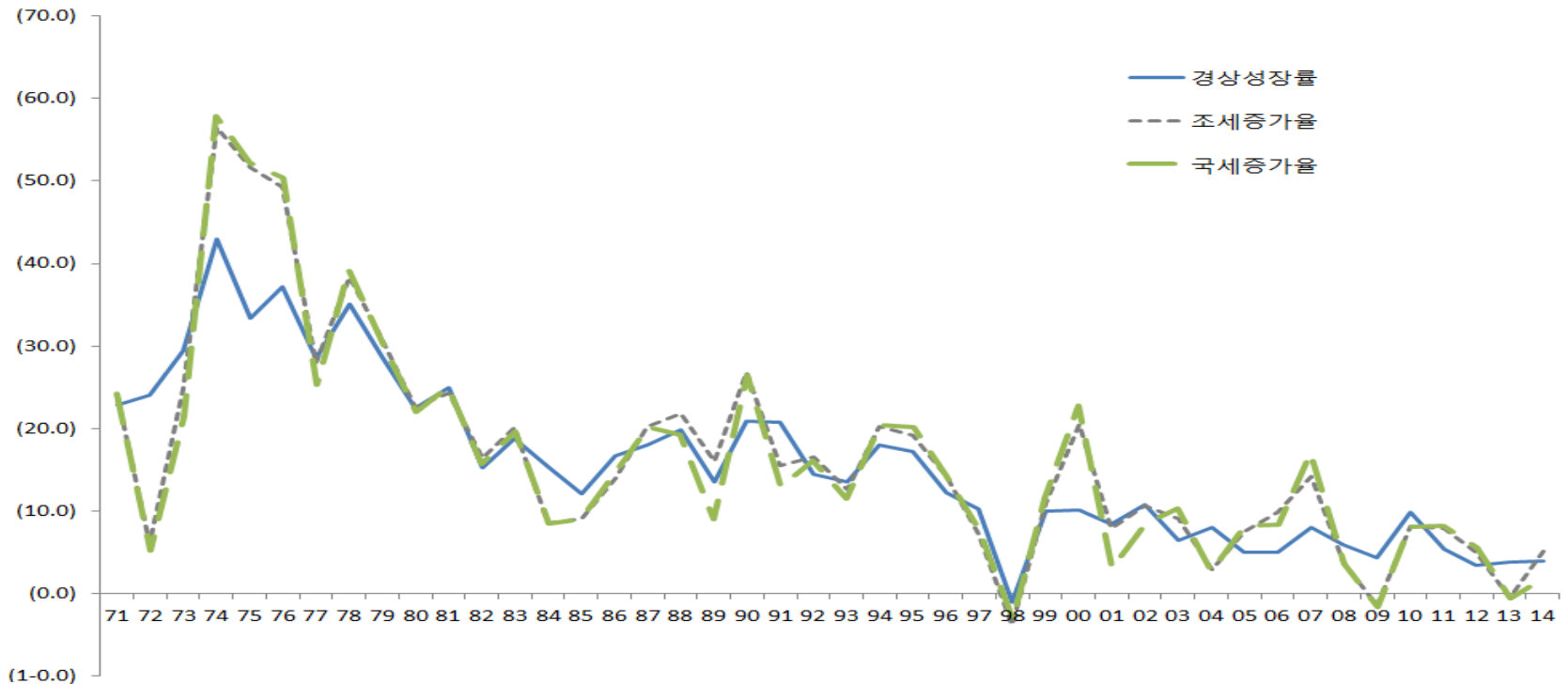


V.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세입기반

2. 성장률 둔화 및 저물가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

-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둔화와 저물가 지속
-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여건들이 성장건인력 약화, 물가 하방 압력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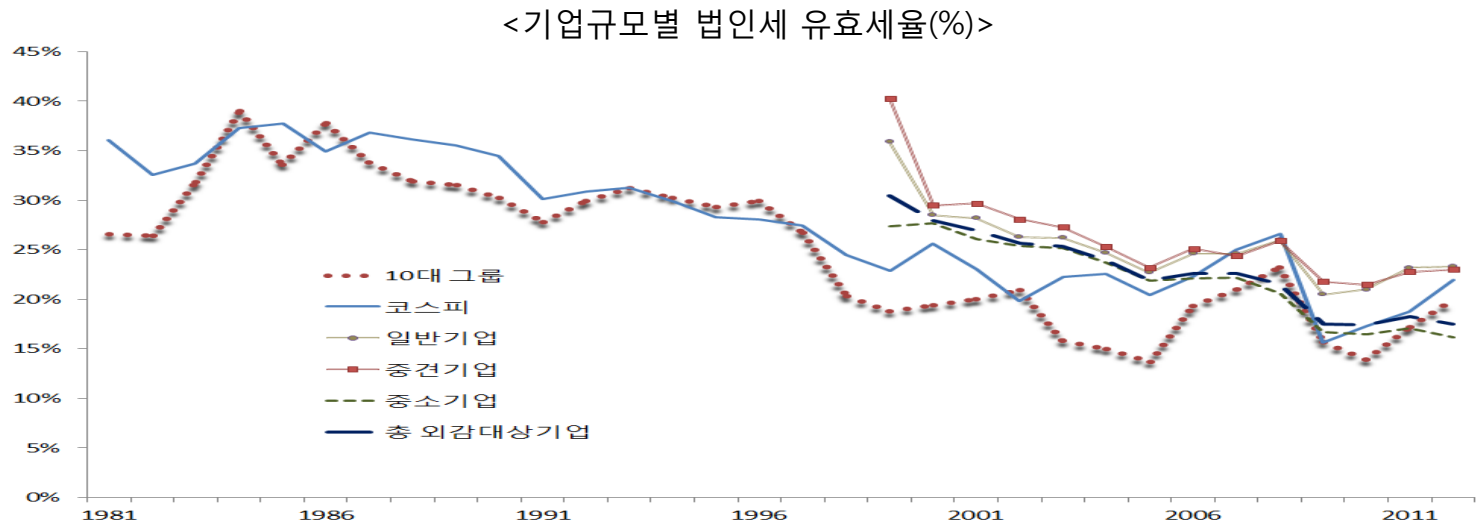
<경상성장률과 조세 증가율(%)>



V.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세입기반

3. 산업구조 변화와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

-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부진에 따른 규모별 업종별 수익성 격차 확대
 - ✓ 노동생산성 격차: 중소기업/대기업 29.2% 서비스업/제조업 39%
 - ✓ 수익률 격차: 상위 10개 기업 20.2% 여타 기업 0.5%
- 세수기반의 불안정 및 법인세 유효세율의 하락
 - ✓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: 일반기업대비 10대 그룹 3~7%p↓ 제조업대비 서비스업 1.7%p↑
- 국제적 자본이동성 확대로 기업들의 전략적 조세회피 수단 증대



V.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세입기반

4. 근로세 면세자 비율 확대와 세부담 집중도 심화

□ 소득세 세입기반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존도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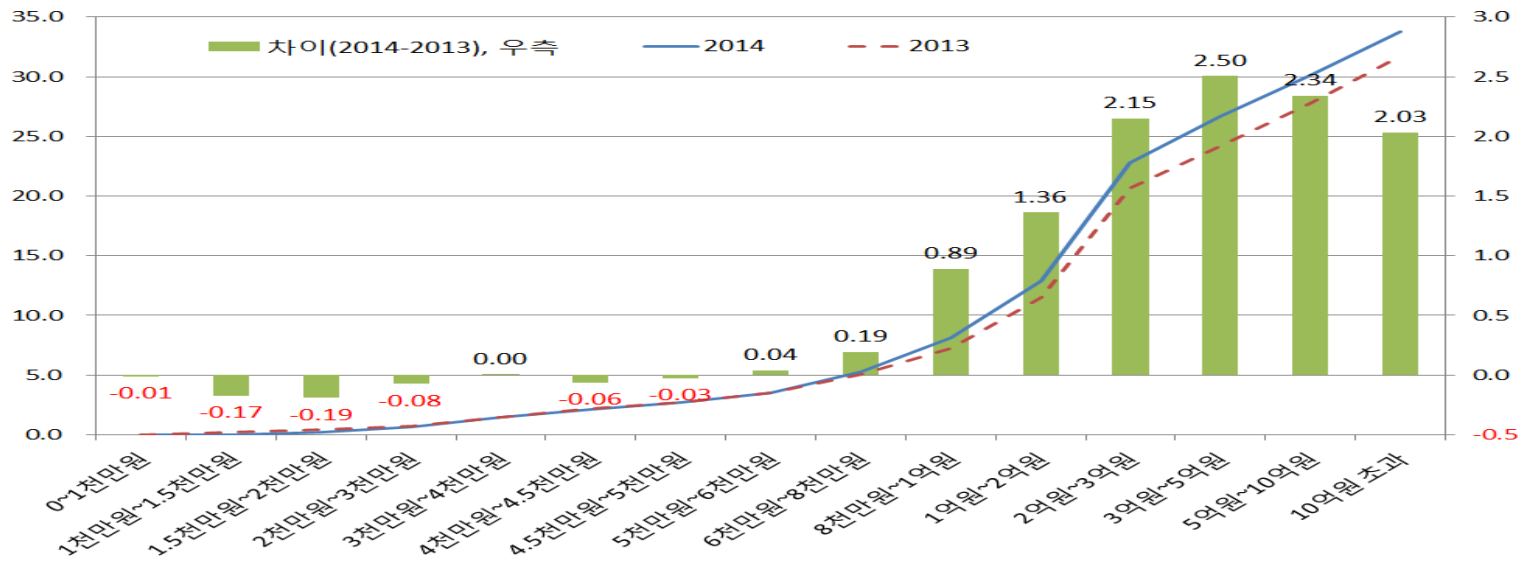
✓ 근로소득세/소득세 비중(%) (2010)41.6 → (2014) 47.6

□ 근로소득자 가운데 과세대상계층에 대한 소득세 집중도 심화

✓ 2013 세법개정 및 연말정산 보완조치에 따른 면세자 비율 확대(32.4% → 48.2%)

✓ 과세대상 근로소득자의 유효세율 변화(%) (2013)4.9 → (2014)6.0

<근로소득자 유효세율 변화(%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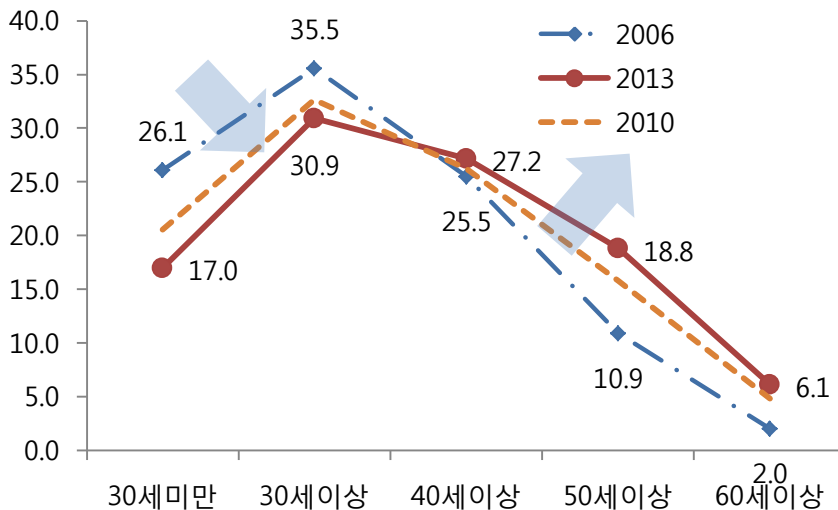


V.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세입기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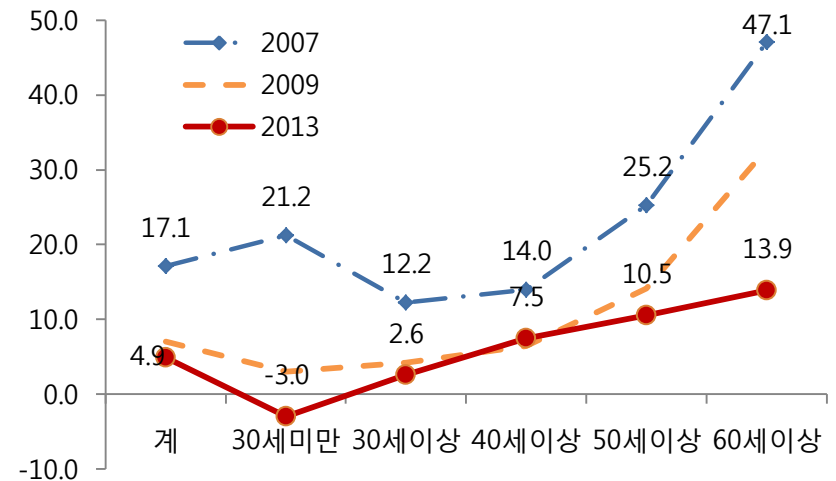
5. 노동시장의 양분화와 소득세 세입기반 위축

- 노동시장의 양분화 심화,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
 - ✓ 정규직 임금대비 비정규직 임금 40.5%, 15~29세 미만 니트족 인구 76만명
- 저소득층의 고착화, 노동 활용도 저하,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
→ 소득세 세입기반의 위축 가능성 증대

<연령대별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 추이(%)>



<연령대별 근로소득세 과세자 증가율(전년대비%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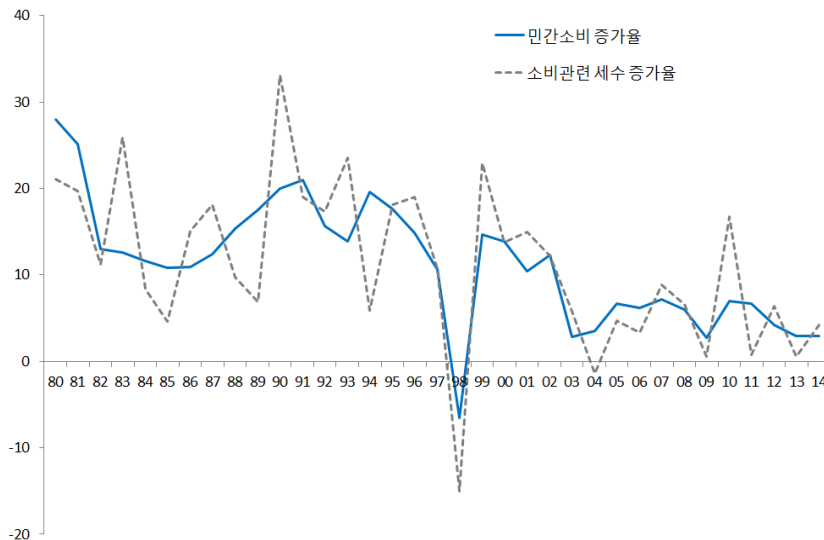


V.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세입기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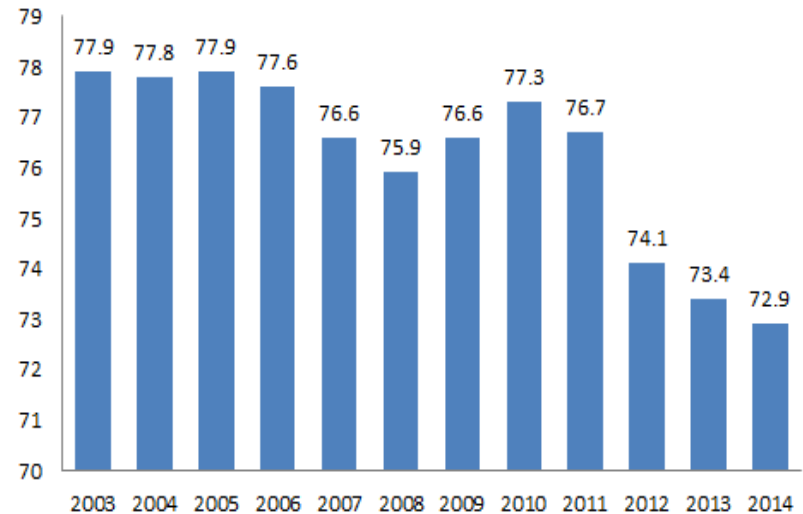
5. 가계 재무구조 악화와 소비세수의 증가세 둔화

- 가계재무구조 악화, 노후대비 저축성향 증가 → 소비기반의 구조적 악화
 - ✓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, 주거비 상승,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
- 무역자유화에 따른 실효관세율 하락, 유류소비 둔화 → 소비세수 증가속도 둔화

<민간소비와 소비관련 세수 증가율(%)>



<가계의 평균 소비성향(%)>



VI. 결론 및 제언

지속가능한 복지 및 적정담세 수준 논의 필요

- ❑ 과거 의존했던 세원 및 조세체계는 향후 예상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한계
→ 재정안정화 기반 강화노력 필요
- ❑ 단기적 경기조절을 위한 재정책대보다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
- ❑ 조세정책적 측면에서는 과세기반 확대에 정책의 초점
 - ✓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세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보다는 효율적 자원조달 기능을 강화할 필요
- ❑ 지속가능한 복지 및 적정 담세수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
 - ✓ 연례적 세수부족 → 세입확대형 세제개편의 필요성 논의 대두
 - ✓ 연말정산 파동 → 증세를 동반한 복지수준의 확대가 가능한가에 대한 화두